

도시 근로자 가구의 빈곤 추이(推移)와 원인에 관한 연구: 조세와 이전소득의 빈곤완화효과를 포함하여*

김 교 성

(중앙대학교)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도시근로자 가구의 빈곤실태와 변화추이, 빈곤가구의 특성, 그리고 빈곤의 원인을 규명하고, 공·사적 이전소득과 조세의 빈곤완화 효과를 평가하여, 우리나라 빈곤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그에 기초하여 보다 바람직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도시가계조사의 연간 원자료를 분석의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종단자료에 대한 분석을 위해 GEE(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가장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그 규모와 심도 차원에서 심각했던 도시 근로자 가구의 빈곤 문제가, 이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여성빈곤, 노령빈곤, 저학력 가구주 가구의 빈곤 등, 전통적인 빈곤가구의 특성이 확인되었으며, 이들 취약집단의 빈곤화 현상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욱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임시·일용직, 단순노무직, 1차 산업과 민간서비스업 종사자 가구의 빈곤화 현상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저임금과 고용불안정이 빈곤의 주된 원인임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빈곤 가구의 특성은 빈곤의 원인에 대한 분석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된다. 그리고 정부의 조세와 공적이전소득의 빈곤완화 효과는 이전의 시기에 비해 크게 확대되었지만, 그 상대적인 효과는 서구의 복지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낮은 수준이다.

주제어: 빈곤, 근로빈곤, 빈곤지위, GEE, 일반화추정방정식

* 이 논문은 2005년도 중앙대학교 학술연구비(일반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1. 서론

빈곤에 관한 기존의 시계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절대적 빈곤선에 기초한 우리나라 빈곤가구의 규모는, 압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결과로 인해, 크게 감소하여 왔다(이상은, 2006).¹⁾ 이에 반해, 실질적인 사회적 불평등의 정도를 반영하는, 상대적 빈곤선에 기초한 빈곤가구의 규모는 지난 30년(1966~1995)간 큰 변화 없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여 왔다(김태성·손병돈, 2002).²⁾ 그러나 우리나라의 빈곤문제는 1997년 말,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감소 추세를 보이던 절대적 빈곤율은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상대적 빈곤 혹은 사회불평등의 문제도 크게 악화되어 사회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처럼 악화된 빈곤과 분배의 문제가 경제위기 이후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김동춘·류정순·정건화·장세훈·허선·노대명·손병돈, 2000).

경제위기 이후,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크게 ① 빈곤의 개념과 측정에 관한 연구(김미곤, 2000; 김미곤·여유진·양시현·강성호·김태완·이강민, 1999; 홍경준, 2005a), ② 개별 가구의 소득원 구성과 빈곤수준 및 소득 불평등 수준의 변화, 그리고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구인회, 2005, 2004, 2002; 여유진·김미곤·김태완·양시현·최현수, 2005; 김교성·반정호, 2004; 김진욱, 2004; 홍경준, 2004; 김교성, 2002; 박찬용·강석훈·김태완, 2002; 유경준, 2003; 금재호·김승택, 2001; 안종범·김철희·전승훈, 2001; 정진호, 2001), 그리고 ③ 빈곤노인(박능후·송미영, 2006; 홍백의, 2005; 최현수·류연규, 2003; 석재은·김태완, 2000), 빈곤아동(류연규·최현수, 2003), 근로빈곤층(김교성·최영, 2006; 금재호, 2006; 김영란, 2005; 노대명·최승아·주연선·구지윤, 2004; 이태진·이상은·홍경준·김선희, 2004) 등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②번과 ③번에 해당되는 연구들은 대

- 1) 절대적 빈곤선에 기초하여 장기적인 빈곤율의 변화를 분석한 연구로는 박순일(1994)과 이상은(2006)의 연구가 있다. 박순일은 1991년 의료부조자 선정기준인 10만원을 절대 빈곤선으로 설정하고, 1967년부터 1998년까지 도시 근로자 가구의 빈곤율 변화를 분석하였는데, 1967년 78.1%에 이르던 빈곤율은 이후 점차 감소하여, 1980년에는 53.1%로 떨어지고, 1990년에는 14.6%로 떨어지며, 1991년에는 11.5%까지 떨어진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한편, 이상은의 연구에 의하면, 1999년 최저생계비에 기초한 1982년 도시 근로자 가구의 절대적 빈곤율은 78.7%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다가, 1990년에는 21.5%로 크게 하락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경제위기 직전인 1997년 약 3% 수준으로 떨어지다가, 경제위기 이후 다시 8% 수준으로 증가되었으나, 이후 2004년까지 3% 수준으로 고정되고 있다. 그는 경제성장과 빈곤과의 실증적 분석의 결과를 통해, 1980~90년대 절대적 빈곤율의 감소에는 경제 성장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2) 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박순일(1994)과 김태성(1995)의 연구가 있다. 도시 근로자 가구의 평균지출의 50%와 60%를 상대적 빈곤선으로 설정한 박순일의 연구에 의하면, 1967년부터 1991년까지의 전 기간동안 상대적 빈곤율은 20% 선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김태성의 연구에 의하면, 1966년부터 1992년까지 도시 근로자 가구의 중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상대적 빈곤율은 9~11%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과거 우리나라 정부의 탈빈곤 정책이 상대적 빈곤의 해결에는 거의 효과가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김태성·손병돈, 2002).

체로 특정 자료에 기초하여, 빈곤 수준 혹은 소득불평등 수준의 실태와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해당 가구의 특성을 파악하며, 빈곤여부 혹은 이행(빈곤진입과 탈출)의 주요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이 이처럼 유사한 주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사용한 기초 자료, 빈곤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조작화의 과정, 그리고 분석방법 등이 상이함으로 인해, 연구의 결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제위기 전·후 우리나라 빈곤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이용 가능한 종단자료(longitudinal data)에 기초하여, 빈곤양상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도시 근로자 가구의 빈곤실태와 변화 추이, 빈곤가구의 특성, 그리고 빈곤의 원인을 규명하고, 공·사적이전소득과 조세의 빈곤완화 효과를 평가하여, 우리나라 빈곤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그에 기초하여 보다 바람직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의 시작점을 1995년으로 잡은 이유는 우선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기존의 연구에서 밝혀진 우리나라 상대적 빈곤율은 1995년 이전까지 거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며, 두 번째는 3년이라는 기간이 경제위기(1998~1999) 이전(1995~1997)과 이후(2000~2005)의 상황을 설명하고 비교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³⁾

본 연구에서 실시한 분석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위기 전·후 우리나라 빈곤과 분배구조의 변화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경제위기 이전인 1995년부터 최근의 2005년까지 도시 근로자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relative poverty rate)과 빈곤갭 비율(poverty gap ratio)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⁴⁾ 둘째, 도시 근로자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고용관련 특성에 기초한 상대적 빈곤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빈곤가구의 특성을 파악하였다.⁵⁾ 셋째, 도시 근로자 가구의 빈곤여부와 그 원인을 ① 경제위기 이전(I 시기: 1995~1997), ② 경제위기 시기(II 시기: 1998~1999), ③ 경제위기 이후 1 시기(III 시기: 2000~2002)와 ④ 경제위기 이후 2시기(IV 시기: 2003~2005)의 네 시기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경제위기 전·후 도시 근로자 가구의 빈곤 원인을 규명하고, 그 주요 변인을 시기별로 비교하였다.⁶⁾ 넷째, 도시 근로자 가구의 소득을 일차소득, 시장소

3) 다만, 경제위기 이후의 시기는 하나의 시기로 분석하지 않고, 2000~2002년의 1시기와 2003~2005년의 2시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분석의 기간을 일정하게 3년으로 설정하여 분석상의 통일을 기하고자 하는 이유도 있지만, 실제로는 분석에 사용한 도시가계연보의 자료가 2003년을 기준으로 크게 변화하여, 두 시기 자료를 하나로 통합(merge)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4) 본 연구에서 빈곤 실태를 분석하는데 있어 절대적 빈곤선(특정 년도의 특정 기준에 의해 빈곤선을 설정하고, 각 년도의 물가상승률이나 GNP 상승률을 고려하여 빈곤선을 추정하여 산출한 뒤, 그것에 기초하여 각 년도의 빈곤율을 산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빈곤선 선정의 임의성과 그것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연구 결과의 신뢰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또한 상대적 빈곤선을 이용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밝혀진 우리나라 도시 근로자 가구의 빈곤 실태와 변화 추이를 기존의 다른 연구의 결과와 쉽게 비교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다른 국가의 그것과 비교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빈곤율이 가지는 한계 즉, 빈곤의 전체적인 수준이나 규모는 잘 표현하나, 그 심각성 정도 혹은 심도(depth)를 설명하지 못하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빈곤문제를 측정하는데 있어 빈곤율과 함께 빈곤갭 비율 지수를 사용하였다.

5) 도시 근로자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포함되는 변수는 가구주의 성, 연령, 교육수준 변수이고, 고용관련 특성에 포함되는 변수는 가구주의 현 직장을 기준으로 직업형태, 직업별 종류, 그리고 업종별 종류 변수이다.

득, 총소득, 가처분소득으로 구분하고, 소득원 유형별 상대적 빈곤율과 빈곤갭 비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공·사이전소득과 조세의 빈곤완화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공적이전소득과 조세의 빈곤완화 효과를 다른 국가의 그것과 비교하여, 정부의 빈곤완화 노력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네 가지 주요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고, 그에 기초한 정책적 함의를 약술하였다.

2.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경제위기 이후부터 최근까지 빈곤의 규모와 특성, 빈곤여부 혹은 빈곤이행의 정태적·동태적 원인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⁷⁾ 이 가운데, 본 연구와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비교적 최근의 종단적인 연구들을 중심으로 기존 연구의 결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⁸⁾ 우선,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빈곤층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 김진욱(2004)의 연구에 의하면, 1996년과 2000년 사이에 새롭게 빈곤층에 진입한 가구는 크게 증가하였고, 빈곤층의 소득분배 효과도 악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가구의 구성(부부, 부부와 부양가족, 독신, 홀부모와 부양가족 등)에 기초하여 구분해 보면, 근로자 가구의 경우, 부부로만 이루어진 가구와 홀부모와 부양가족 하나 혹은 둘인 가구, 그리고 비근로자 가구의 경우, 부부로만 이루어진 가구와 부양가족이 둘 이상인 가구 중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이 새롭게 빈곤층에 진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빈곤층을 대상으로 전국규모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동태적 분석을 실시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구인회(2005; 2004), 홍경준(2004), 그리고 김교성·반정호(2004)의 연구가 있다. 우선, 구인회(2004)는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1991년, 1996년, 2001년)를 이용하여 1990년대 빈곤수준의 변화와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데, 연구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 빈곤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여기에는 경제성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 증가하기 시작한 빈곤율은 분배구조의 악화와 빈곤취약가구의 증가와 같은 인구학적 변화가 그 주된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구인회(2005)는 다른 연구에서 한국노동패널조사의 176차년도 자료에 기초하여 빈곤의 동태적 양상 가운데 빈곤 지속기간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는 연구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통해, 우리나라 빈곤층의 빈곤 탈피 양상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5년 이상의 장기빈곤층도 전체 빈곤층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장기빈곤층의 대표적인 집단은 노인가구주와 비노인 여성가구주 가구라고 주장

6) 이를 위해, 본 연구는 GEE(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회귀분석의 모형을 구축하였고, 분석 모형에, 앞서 설명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고용관련 특성, 그리고 가구관련 특성(가구원수, 취업 가구원수)을 포함하였다.

7) 선행 연구들은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낮은 노동생산성에서 찾고 있는 인적자본이론이나 거시적인 측면에서 빈곤을 바라보는 후기 산업화이론 혹은 노동시장분절이론에 기초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지면의 제한으로 빈곤의 원인과 관련한 이론적 검토는 생략하였다.

8) 여기서 의미하는 최근의 연구들은 2004년 이후의 연구를 의미한다. 이전의 연구들(금재호·김승택, 2001; 정진호, 2001; 구인회, 2002; 김교성, 2002; 박찬용 외, 2002; 안중범 외, 2001; 최현수·류연규, 2003)은 이미 많은 연구들에서 소개되고 있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하고 있다. 홍경준(2004)도 한국노동패널조사의 1~5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빈곤주기에 대한 동태적 분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빈곤층 가운데 빈곤선 주변에서 빈곤의 진입과 이탈을 반복하는 사람들의 빈곤문제는 항상 빈곤의 개념으로 접근하여야 하며, 노인가구의 약 23.5%와 편부모 가구의 9.6%가 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김교성·반정호(2004)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2~4차년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경제위기 이후 고용불안정과 빈곤경험이 빈곤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는데, 그 결과 가구주가 안정된 고용상태를 유지할수록 빈곤 탈피의 가능성은 높으며, 동시에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빈곤가구의 빈곤진입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빈곤의 경험이 있는 가구주의 경우 빈곤상태를 탈피하더라도 다시 빈곤가구로 환원될 가능성이 높으며, 반대로 한번 빈곤상태에 고착된 가구는 그 상태에서 탈피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특정집단 가운데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금재호(2006)와 김교성·최영(2006)의 연구가 있다.⁹⁾ 금재호(2006)는 한국노동패널조사 1~6차년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빈곤의 규모와 특성, 그리고 동태적 이행과정을 분석하고 있는데, 빈곤가구의 절반 이상이 근로빈곤가구이며, 가구주의 연령이 높고 저학력일수록 근로빈곤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김교성·최영(2006)도 한국노동패널조사의 2~7차년도의 자료와 일반화 선형모형(HGLM)을 이용하여 근로계층의 빈곤 결정요인을 추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근로자의 10% 내외가 근로빈곤층이며, 이들의 빈곤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여성, 낮은 교육수준, 불안정한 취업형태 등을 들고 있다.¹⁰⁾ 한편, 노인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는데, 박능후·송미영(2006)은 노인이 포함되어 있는 가구를 네가지 유형(노인단독, 노인부부, 노인 가구주+비노인 동거, 미노인 가구주+ 노인+동거)으로 구분하여 1998~2002년의 기간동안의 상대적 빈곤율과 상태변화 여부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노인가구는 비노인가구와 달리 빈곤 탈출보다 빈곤 진입 비율이 높고, 모든 소득의 변화가 빈곤 탈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근로소득의 감소가 빈곤진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3. 연구 방법

1) 분석 자료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도시가계조사’의 1995년부터 2005년까지의 연간 원자료(raw data)이다. 도시가계조사는 통계청에서 도시가구의 생활수준실태와 그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매

9) 이 외에도 노대명 외(2004)와 이태진 외(2004) 등과 같은 국책연구소에서 발간된 연구보고서가 있지만, 그 내용이 방대하여 생략하기로 한다.

10) 그들의 연구에서 연령변수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이는 65세 이상 노인층을 제외한 취업층을 연구의 주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연령의 부(-)적 효과가 상쇄된 것으로 추정된다.

월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2인 이상 가구 중 약 5,200개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가계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하는 것이다(통계청, 2003). 따라서 도시가계조사는 우리나라 빈곤의 실태와 원인을 파악하는데, 표본의 대표성 측면에서 일정 정도 결함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generalize)하는데 한계가 있다.¹¹⁾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가계조사는 장기적인 시계열 연구에 있어 일관성과 신뢰성을 갖춘 사용 가능한 유일한 미시자료(micro data)로써, 본 연구는 자료의 선택에 다른 대안이 없다(김교성, 2003).¹²⁾ 빈곤이나 소득불평등 수준의 변화 추이를 연구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시계열 연구들이 도시가계연보를 사용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2) 빈곤 지수

본 연구에서는 빈곤의 실태와 변화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두개의 지수를 활용하였다. 빈곤가구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빈곤율(poverty rate)을 이용하였으며, 빈곤의 심각성 정도나 심도를 파악하기 위해 빈곤갭 지수(poverty gap ratio)를 이용하였다. 빈곤율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빈곤 관련지수로, 빈곤선 이하의 가구 수를 전체 가구 수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다.

$$PR = PH/WH$$

PR : 빈곤율, PH : 빈곤가구, WH : 전체가구

빈곤율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빈곤선은 절대적 빈곤선(absolute poverty line)과 상대적(relative) 빈곤선의 기준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OECD에서 제시한 전체소득의 중간소득(median income)의 1/2이라는 상대적 빈곤선을 이용하였다.¹³⁾ 또한 빈곤측정의 기준은 소득

- 11) 도시가계조사는 1인 가구가 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농·어촌가구, 음식업, 여관, 하숙업을 경영하는 겸용주택가구, 영업상 사용인이 2인 이상 동거가구, 비행연 자취가구, 단독가구, 외국인 가구 등을 제외한 도시민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표본의 대표성 측면에서 일정 정도 결함을 가지고 있다. 통계청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03년 조사부터 그 대상을 전국의 2인 이상 가구(점차 1인 이상 가구로 확대할 예정임)로 확대하였으며, 2004년부터 ‘도시가계연보’가 아닌 ‘가계조사연보’를 발간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변화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나, 본 연구의 입장에서 보면 자료가 가지는 또 다른 한계가 발생한 것이다. 즉, 본 연구는, 연구의 범위를 도시 근로자 가구로 제한한다 하더라도, 분석 자료가 가지는 두 가지의 한계가 있다. 그것들은 ① 근로자 가구의 조사 대상을 2인 이상의 가구로 제한했다는 점이고, ② 분석에 사용된 자료가 2003년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 12) 이 외에도 활용 가능한 자료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 조사자료, 대우경제연구소의 한국가정경제활동조사자료 등이 있다. 그러나 노동패널자료는 1998년부터 조사되었고, 가구소비실태조사는 1990년부터 3번의 조사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대우패널 자료는 1998년 이후 조사가 중단되어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장기간 중단연구의 기간과는 맞지 않는다.
- 13) 상대적 빈곤선에 대한 정의도 국제기구, 개별국가, 학자들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OECD의 중간소득의 40%, 50%, 60%와 World Bank의 평균소득의 1/2(선진국기준), 1/3(개발도상국기준)이다(김교성·최영, 2006).

(income)을 사용하였고, 가구(household)를 단위로 상대적 빈곤 여부를 결정하였다. 대부분의 빈곤 관련 연구들은 가구를 단위로 하여 실질적인 빈곤의 규모나 특성을 측정하고 파악하지만, 그럴 경우 가구규모, 즉 가구원수의 차이가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OECD(2001)의 균등화지수(equivalence scales)를 사용하여 가중치가 부여된 소득에 기초하여 빈곤가구의 여부를 결정하였다.

$$Y_e = Y_i / \sqrt{s_i}$$

Y_e : 균등화된 소득, Y_i : i 가구의 소득, S_i : i 가구의 가구원 수

빈곤의 심각성 정도와 심도를 파악하기 위해 빈곤갭 비율을 사용하였다. 빈곤갭은 빈곤선과 개별 빈곤가구의 소득의 차이를 의미하며, 총빈곤갭은 전체 빈곤가구의 빈곤갭을 합산하여 산출할 수 있다. 이러한 빈곤갭 지수와 관련하여, 특정 연구는 총빈곤갭을 빈곤가구로 나누어 가구당 빈곤갭을 사용하기도 하고(홍경준, 2002), 다른 연구는 총빈곤갭을 빈곤가구에 빈곤선을 곱한 액수로 나눈 빈곤갭 비율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여유진 외, 2005), 본 연구에서는 후자를 사용하였다.

$$PGR = \sum_{i=1}^P (PL - Y_i) / PL \times P$$

PGR : 빈곤갭 비율, P : 빈곤선 이하에 있는 가구의 수

PL : 빈곤선, Y_i : 빈곤선 이하에 속한 개인의 소득

3) 소득원의 유형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도시 근로자 가구의 빈곤측정의 기준으로 소득을 사용하였다. Atkinson, Rainwater, & Smeeding(1995)는 가구의 소득을 ① 근로소득(WI: wage & salary income), ② 자산소득을 제외한 일차소득(PII: primary income excluding property income), ③ 자산소득을 포함한 일차소득(PI2: primary income including property income), ④ 시장소득(MI: market income), ⑤ 총소득(GI: gross income), 그리고 ⑥ 가처분소득(DI: disposable income)의 여섯 가지로 구분하였다.¹⁴⁾ 한편, Mitchell(1991)은 소득이전의 과정에 따라 가구의 소득을 시장소득(MI), 총소득

14) 자산소득을 제외한 일차소득은 근로소득에 총사업소득을 포함한 소득이고, 자산소득을 포함한 일차소득은 근로소득과 총사업소득에 금융자산소득을 포함한 것이며, 시장소득은 일차소득에 직업연금이나 기타 현금소득을 포함한 것이고, 총소득은 위의 소득에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수당의 현금급여를 포함한 것이다. 가처분소득은 총소득에서 직접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을 제외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득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을 합친 소득을 일차소득(PI)으로 구분하고, 일차소득에 사적이전소득을 합친 소득은 시장소득(MI), 그리고 시장소득에 공

(GI), 그리고 가처분소득(DI)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연구의 결과와 비교가 용이하도록 많은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에 기초하여 상대적 빈곤율과 빈곤갭 비율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공·사이전소득과 조세 및 사회보장세의 빈곤완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차소득(PI), 시장소득(MI), 총소득(GI)에 기초한 빈곤율과 빈곤갭 비율도 산출하였다. 일차소득은 가구의 근로소득과 사업 및 부업소득, 그리고 재산소득을 합친 금액을 의미한다.¹⁵⁾ 시장소득은 일차소득에 사적이전소득을 포함한 소득이며, 총소득은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을 포함한 소득을 의미한다. 또한 가처분소득은 총소득에서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을 지출한 금액이다.¹⁶⁾ 아래의 <그림 1>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시 근로자 가구의 소득원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경상소득 (+)	근로소득	일차소득 (PI)	시장소득 (MI)	총소득 (GI)	가처분 소득 (DI)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비경상지출 (-)	조세				
	사회보험기여				

<그림 1>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원 구성

적이전소득을 합친 소득은 총소득(GI)으로 구분한다(유경준, 2003; 박찬용 외, 2002). 본 연구는 이에 기초하여 소득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 15) 도시가계연보의 소득원의 유형은 크게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기타소득)으로 구분되며, 경상소득은 다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그리고 공적이전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도시가계연보에서 제공하는 각 소득원 유형별 소득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근로소득은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특정한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받은 일체의 현금 및 현물 보수로서 봉급 또는 임금과 상여금, 수당 등을 포함하며,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을 공제하기 전의 총액을 말한다. 그리고 사업소득은 가구주 또는 기타 가구원이 자영업주 또는 고용주의 지위에서 직접 사업을 경영하거나 전문적인 지식 또는 재능을 이용하여 얻은 총수입 중에서 가게로 전입된 소득을 의미하며, 자산소득은 예금, 저금이자, 공사채 이자와 남에게 빌려준 돈의 이자, 주식배당금, 신탁투자에 의한 배당금과 남에게 빌려준 가옥 및 토지 등 부동산 임대료 및 기타재산의 임대료와 권리금을 의미한다. 공적이전소득이란 각종 연금법과 국가유공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과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받은 각종 사회보장급여의 합계를 의미하고, 사적이전소득은 타가구로부터 받은 송금 및 생활보조금을 의미한다(통계청, 2003; 김교성, 2003 재인용).
- 16) 따라서 사적이전소득의 빈곤완화효과는 사적이전소득이 이전되기 전의 일차소득과 이전된 후의 시장소득(일차소득 + 사적이전소득)의 차이에 기초하여 분석하고, 공적이전소득의 빈곤완화효과는 공적이전소득이 이전되기 전인 시장소득과 이전된 후의 총소득(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의 차이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조세와 사회보험기여금의 빈곤완화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조세와 사회보험기여금을 지출하기 이전의 총소득과 이전한 후의 가처분소득(총소득 - 조세와 사회보험기여금)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4) 주요 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앞서 설명한 방법에 기초하여 산출한 매년도의 빈곤여부이다. 빈곤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설정된 독립변수는 크게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가구관련 특성, 그리고 고용관련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는 가구주의 성, 연령, 교육수준 변수가 포함되었다. 성별은 남성과 여성의 이항(dummy) 변수로 구분하였으며, 연령은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의 속성(attributes)으로, 그리고 교육수준은 초졸 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학졸업 이상의 속성으로 구성하였다. 가구관련 특성으로는 가구원 수(명)와 부양자 수가 있는데, 가구원 수는 연속(continuous)변수로, 부양자 수는 일인생계부양자 가구와 2인 이상 생계부양자 가구로 구분하여 이항변수로 분석모형에 포함하였다.¹⁷⁾ 그리고 고용관련 특성에는 가구주의 직업형태, 현 직장의 직업별 종류와 산업별 종류 변수가 포함되었다. 직업형태는 공무원, 공무원 외 사무종사자, 기능공 및 상용기능노무자, 임시·일용노무자로 구분하였고¹⁸⁾, 직업별 종류는 관리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생산직, 단순노무직의 5개 직종¹⁹⁾으로 구성하였으며, 산업별 종류는 1차 산업, 제조업, 건설·전기·운수·창고·통신·금융·보험업, 공공 서비스업, 민간 서비스업의 5개 업종²⁰⁾으로 분류하였다.

5)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빈곤가구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고, 소득원 구성별 빈곤율과 빈곤갭 비율을 분석하

-
- 17) 부양자 수를 취업인 수와 같은 연속변수가 아닌 생계부양 형태로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한 이유는 현재 복지국가 재편의 주요한 주체가운데 하나인 보편적 생계부양자 가구로의 전환이 우리 사회의 빈곤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함이다.
 - 18) 도시가계조사는 가구주의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가구를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구분하고, 임금근로자는 다시 공무원, 사무종사자, 상용생산직, 임시·일용생산직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다른 차원의 범주를 하나의 변수에서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도시가계조사에서 고용불안정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변수로 다른 대안이 없다.
 - 19) 직종의 구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직종은 ① 관리전문직(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법인관리자, 종합관리자, 물리·수학 및 공학전문가, 과학 및 보건전문가, 교육전문가, 기타전문가, 자연과학 및 공학 기술공, 생명과학 및 보건 준전문가, 교육 준전문가, 기타 준전문가), ② 사무직(일반 사무직, 고객봉사 사무직), ③ 서비스직(대인 및 보호서비스 근로자, 모델, 판매원 및 선전원), ④ 생산직(출하목적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 자급농업 및 어업근로자, 추출 및 건축 기능근로자,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근로자, 정밀 수공업, 인쇄 및 관련 기능 근로자,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 고정 장치 및 관련 조작용, 기계조작용 및 관련 조작용, 운전기사 및 이동장치 조작용), ⑤ 단순노무직(행상 및 단순서비스직 근로자, 농림어업관련 단순노무자, 채광, 건설, 제조 및 운수관련 단순노무자)으로 구성되어 있다.
 - 20) 업종의 구분은 ① 1차 산업(농업, 수렵 및 임업, 어업, 광업), ② 제조업(제조업), ③ 건설·전기·운수·창고·통신·금융·보험업(전기, 가스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④ 공공서비스업(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⑤ 민간서비스업(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가사 서비스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과 교차분석(cross-table)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빈곤여부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일반화추정방정식(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이하 GEE)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종속변수가 빈곤여부와 같은 이항변수(discrete variable)일 경우, 로지스틱(logistic) 회귀분석이나 프로빗(probit) 회귀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개별 사례들은 독립적(independent)이어야 한다($Cov[\epsilon_i, \epsilon_j] = 0; \text{for all } i \neq j$)는 기본 가정이 필요하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본 연구는 IMF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의 일정 기간(2~3년)동안, 도시 근로자 가구의 빈곤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개별 사례들은 다수의 시점(multiple points in time)에서 다수의 관찰 사례를 갖게 되고, 이 경우 사례 간 자기상관(autocorrelation)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단(longitudinal) 혹은 군집 자료(clustered data)를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대표적인 모형인 GEE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Liang와 Zeger(1986)에 의해 처음 제안된 GEE 모델은 GLM (generalized linear model)의 발전된 형태의 분석 모형으로, 반복측정(repeated measures) 자료의 분석에 적합한 분석 방법이다(Allison, 1999). 이러한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SPSS for window 프로그램(version 11)을 사용하였고, GEE 회귀분석만 SAS 프로그램(version 9.1)을 사용하였다.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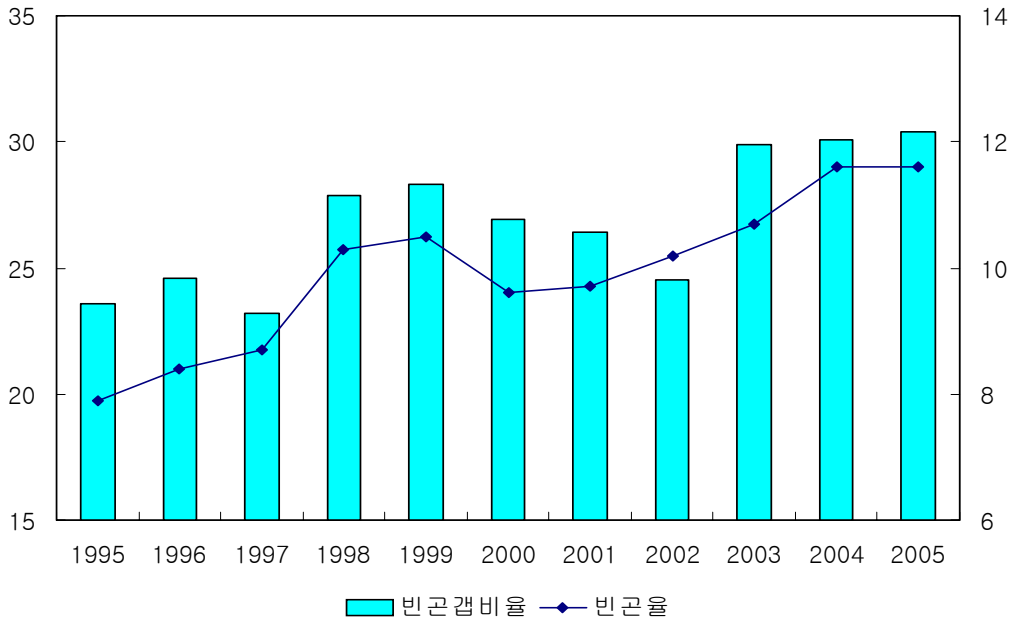
4. 빈곤 추이와 빈곤 가구의 특성

1) 빈곤율과 빈곤갭 비율의 변화

본 연구의 기간으로 설정된 1995년부터 2005년까지의 가처분소득에 기초한 도시 근로자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과 빈곤갭 비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 2>와 같다. 우선 빈곤의 양적 측면을 보여주는 빈곤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약간의 등락이 있지만, 분석의 기간동안 상대적 빈곤율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우선 경제위기 이전 시기인 1995~1997년에 7.9~8.7%에 불과하던 도시 근로자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외환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 시기인 1998년과 1999년에 각각 10.3%와 10.5%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후 2000년(9.6%)과 2001년(9.7%)에는 다시 9.0% 수준으로 하락하여 조금 개선되는 기미를 보이나, 2002년 다시 10.2%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2004년과 2005년에는 11.6%로 고점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최근 도시 근로자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경제위기 시기를 넘어 크게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1) SAS 통계 프로그램에서는 GEE 모델의 구축을 위해 GENMOD 명령문을 사용하는데, 상관관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사례 간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REPEATED 명령문을 통해 사례(id)를 통제한다. 또한 TYPE에 대한 선택(option)을 통해, 군집 내(within cluster) 사례들 사이(among observations)의 상관관계 구조를 명시하게 되는데,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모든 시점에서 상관관계가 일정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EXCH (exchangeable)를 선택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빈곤갭 비율의 변화 추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경제위기 이전인 1997년에 23.2%에 불과하던, 도시 근로자 가구의 빈곤갭 비율은, 경제위기 시기인 1998년과 1999년에 각각 27.9%와 28.3%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후 2000-2002년의 시기에는 24.5~26.9%로 다소 낮아지지만, 2003년의 29.9%를 시작으로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하여, 2004년(30.1%)과 2005년(30.4%)에는 30.0%대를 넘어서고 있다. 이는 최근 도시 근로자 가구의 빈곤양상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적인 증가와 함께, 질적으로도 크게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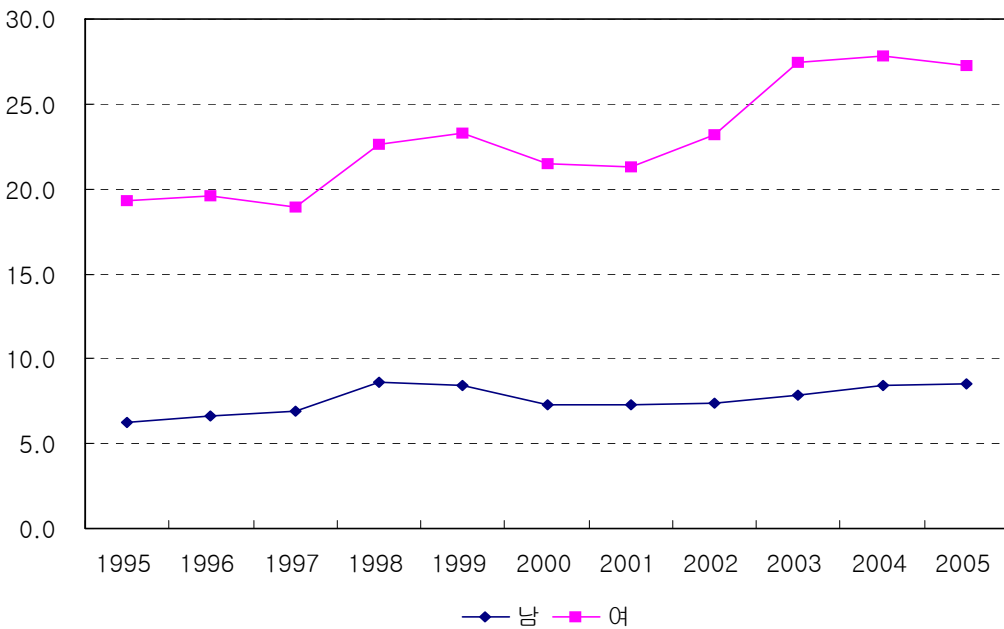
<그림 2> 도시근로자 가구의 빈곤율과 빈곤갭 비율의 변화 추이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기초한 빈곤율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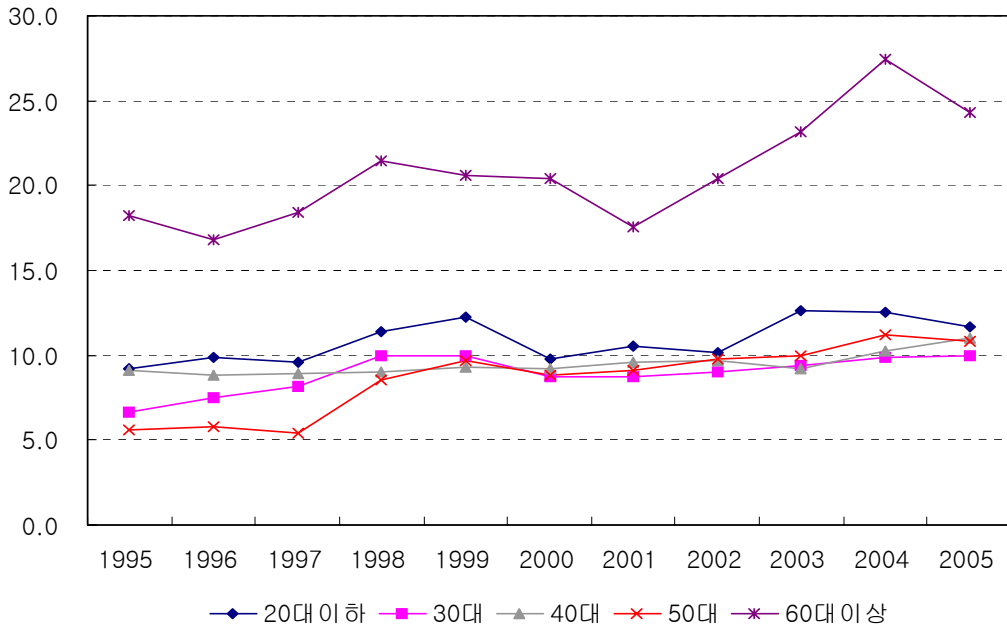
본 절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기초하여 도시근로자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볼 것이다. 아래의 <그림 3>, <그림 4>, <그림 5>는 각각 도시 근로자 가구주의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변화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도시 근로자 가구주의 성별 빈곤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분석의 전 기간에 걸쳐 여성가구주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남성의 그것보다 크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 가구주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분석의 전 기간동안 최소 6.2%(1995)에서 최대 8.6%(1998)의 수준에 불과하지만, 여성 가구주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경제위기 시기에 각각 22.6%와 23.3%로 남성에 비해 거의 세 배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2003년 이후에는 그 수치가 27.4% 이상까지 높아지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연령별 빈곤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전 기간에 걸쳐 60대 이상 가구주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다른 연령대의 그것에 비해 두 배 이상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러한 빈곤의 노령화 현상도, 앞선 빈곤의 여성화 현상과 같이, 경제 위기 시기 크게 증가하여, 이후 개선되지 못하고, 2003년 이후 점차 심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20대 이하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위기 시기에 11.4~12.2%까지 증가했던 20대 이하 청년 가구주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이후 조금 안정(9.8~10.5%) 되다가, 최근 들어 다시 경제위기 시기의 수준(11.7~12.6%)까지 악화되고 있다. 또한 50대 가구주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경제위기 시기에 큰 폭으로 상승하여,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점차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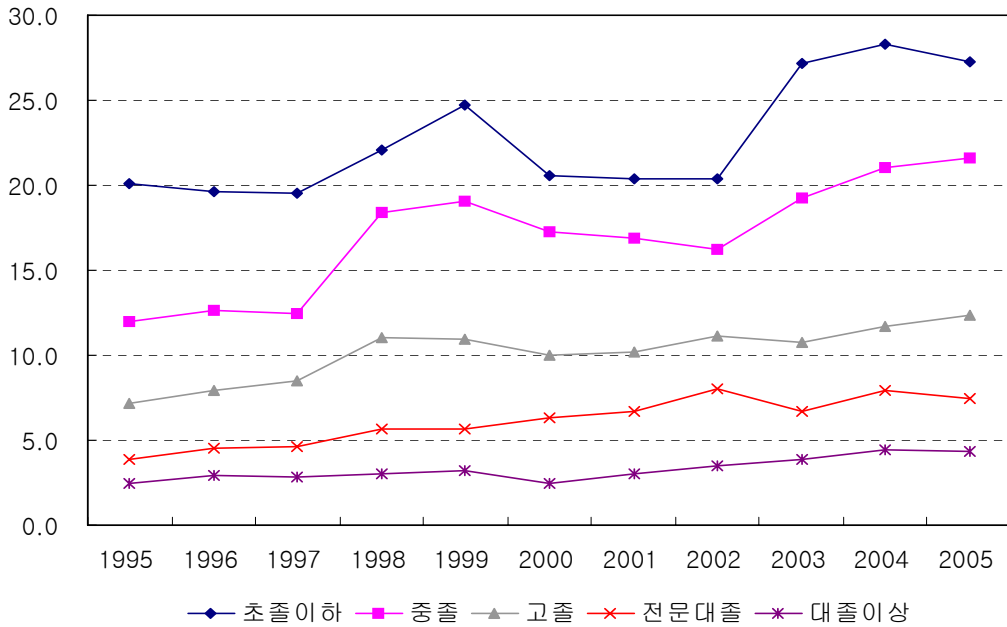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도시 근로자 가구주의 교육수준별 상대적 빈곤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초졸 이하나 중졸 이하 가구주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전문대 졸이나 대학 졸 가구주 가구의 그것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가구주의 저학력이 빈곤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결과이다. 더욱이 이러한 저학력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경제위기 시기에 더욱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 저학력 근로자가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적 위험에 더욱 취약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빈곤율의 변화추이에 대한 분석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도시근로자 가구의 빈곤실태는 여성빈곤, 노령빈곤, 저학력 빈곤 등의 전통적인 빈곤가구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취약 집단의 상대적 빈곤율은 공통적으로 경제위기 시기와 2003년 이후에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림 3> 도시근로자 가구주의 성별 빈곤율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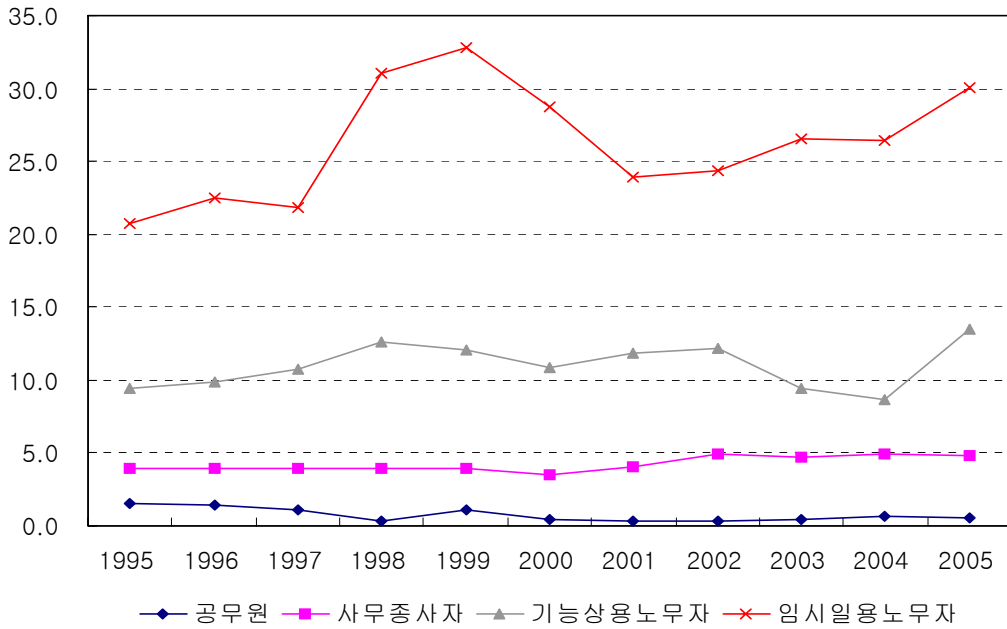
<그림 4> 도시근로자 가구주의 연령별 빈곤율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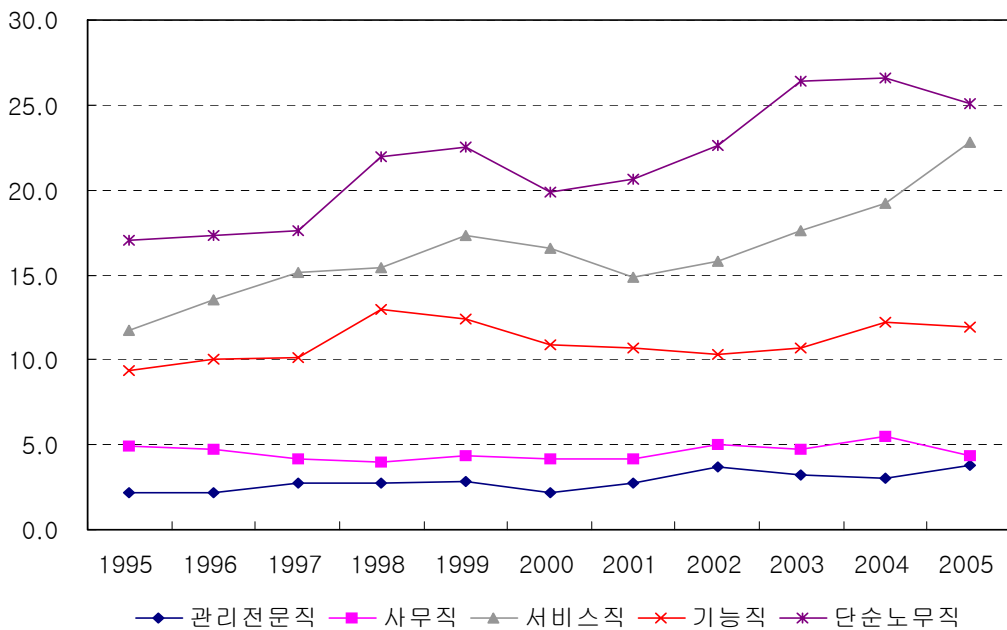
<그림 5> 도시근로자 가구주의 교육수준별 빈곤율의 변화 추이

3) 고용관련 특성에 기초한 빈곤율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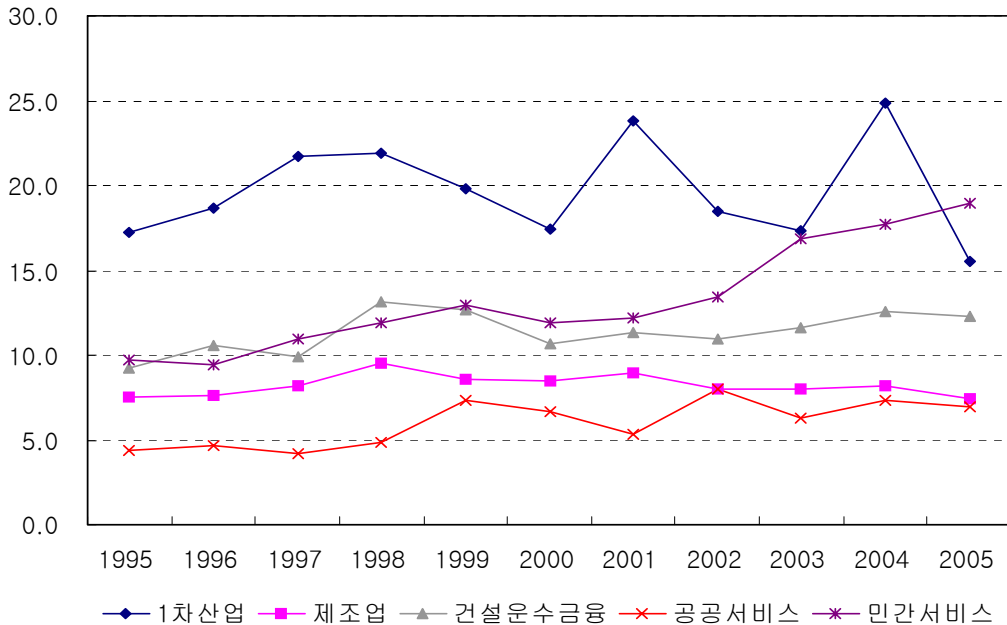
본 절에서는 고용관련 특성에 기초한 도시 근로자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볼 것이다. 우선 도시 근로자 가구의 직업형태별 상대적 빈곤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임시·일용노무자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이 다른 직업형태를 가지고 있는 가구주 가구의 그것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특히 경제위기 시기의 임시·일용노무자 가구주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무려 31.0%와 32.8%의 높은 수준까지 치솟고 있으며, 경제위기가 끝난 2000년에도 그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28.7%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후 2001년(23.9%)과 2002년(24.4%)에는 경제위기 이전의 수준까지 어느 정도 개선되는 기미를 보이나, 2003년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5년에는 다시 30.0%를 넘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 근로자 가구의 높은 상대적 빈곤율 수치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 혹은 근로빈곤층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더욱이 최근 들어 기능·상용노무자의 상대적 빈곤율도 13.5%(2005년)를 넘어서고 있어, 우리 사회의 근로빈곤층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한편, 도시 근로자 가구주가 고용되어 있는 직종과 업종별 상대적 빈곤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우선 직종별 상대적 빈곤율은 단순노무직과 서비스직의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고, 관리전문직과 사무직의 수치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업종별 상대적 빈곤율은 1차 산업의 수치가 높은 반면, 공공서비스업과 제조업이 비교적 안정된 수치를 보이고 있다. 특이할만한 점은, 1차 산업 종사자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경제위기 시기 이후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민간서비스업 종사자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6> 도시근로자 가구주의 직업 형태별 빈곤율의 변화 추이



<그림 7> 도시근로자 가구주의 직종별 빈곤율의 변화 추이



<그림 8> 도시근로자 가구주의 업종별 빈곤율의 변화 추이

5. 빈곤의 원인에 대한 시기별 분석

본 절에서는 도시 근로자 가구의 빈곤 원인에 대한 분석을 위해 실시한 GEE 회귀분석의 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분석 모델에는 연구 대상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구관련 특성, 그리고 고용 관련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들이 포함되었다. 또한 연구의 분석 기간을 크게 네 시기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경제위기 시기(Ⅲ 시기)와 이전(Ⅰ 시기), 그리고 이후(Ⅲ·Ⅳ 시기) 시기의 빈곤 원인을 비교하였다.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도시 근로자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가구 특성 변수의 빈곤여부에 대한 영향력은 분석의 시기(ⅠⅣ 시기)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포함된 변수부터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분석의 전 기간(ⅠⅣ 시기)동안 남성 가구주 가구의 빈곤가능성이 여성 가구주 가구의 그것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빈곤의 여성화 현상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또한 30대, 40대, 50대 가구주 가구의 빈곤 가능성은 60대 이상 가구주 가구의 그것보다 각각 낮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 가구주 가구의 높은 빈곤 가능성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20대 이하 가구주 가구와 60대 이상 가구주 가구의 빈곤 가능성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청년 가구주 가구의 빈곤 현상도 노인 가구주 가구 못지 않게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초졸 이하, 중졸, 고졸 가구주 가구의 빈곤가능성은 대학 졸 이상 가구주 가구의 그것보다 각각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낮은 학력 혹은 인적자본의 수준이 빈곤의 주된 원인이라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교육 수준 변수와 관련하여 특이한 점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던 전문대 졸 가구주 가구와 대학 졸 이상 가구주 가구의 빈곤 가능성이 경제위기가 끝난 직후인 III 시기(2000~2002)에 차이를 보이며, 전문대 졸 가구주 가구의 빈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이다.

가구 특성과 관련된 변수인 가구원 수와 부양자 수 변수는 모두 분석의 전 기간(ⅠⅣ 시기)에 걸쳐 빈곤 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빈곤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연구의 결과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2인 이상 생계부양자 가구에 비해 일인 생계부양자 가구의 빈곤할 가능성이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빈곤한 가구에서, 가구주 혹은 주 부양자의 저임금을 보충하기 위하여 주부나 학생 등의 다른 가구원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나, 이들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대체로 비정규직이고 저임금인 상태로--높지 않기 때문에, 2인 이상이 소득 활동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빈곤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횡단자료에 기초한 분석의 결과(윤홍식·조막래, 2006)와 동일한 것으로 다른 국가와는 차별화된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현상으로 이해된다.²²⁾

도시 근로자 가구주의 고용관련 특성 가운데, 직업형태의 변수는 분석의 전 기간(ⅠⅣ 시기)동안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공무원, 사무종사자, 그리고 기능·상용노무자 가구주 가구는 임시·일용노무자 가구주 가구와 비교하여 각각 상대적으로 낮은 빈곤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고용형태와 빈곤여부의 높은 상관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결과이다.²³⁾ 그러나 앞선 분석의 결과와는 조금 다르게, 직종과 업종 변수의 빈곤 가능성에 대한 영향력은 분석의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직종 변수의 경우, ⅠⅢ 시기(1995~2002)의 분석에서는 관리전문직, 서비스직, 생산직에 종사하는 가구주 가구의 빈곤 가능성이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가구주 가구의 그것에 비해 각각 낮게 나타났으며, 사무직과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가구의 빈곤 가능성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Ⅳ 시기(2003~2005)의 분석에서는 사무직 근로자 가구의 빈곤 가능성도 단순노무직 근로자 가구의 그것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다른 직종에 비해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빈곤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시기별 분석의 결과가 가장 상이하게 나타난 변수는 업종 변수인데, 우선 경제위기 이전인 I 시기(1995~1997)에는 유일하게 1차 산업 종사자 가구의 빈곤 가능성이 제조업 종사자 가구의 그것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위기 시기인 II 시기(1998~1999)에는 건설·전기·운수·창고·통신·금융·보험업과 공공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가구의 빈곤 가능성도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가구에 비해 각각 높게 나

22) 일반적인 서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인 생계부양자 가구의 빈곤율은 2인 생계부양자 가구에 비해 2~6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현상을 금재호·김승택(2001)은 부가노동자 효과로 설명하고 있다.

23) 김교성·반정호(2004)의 연구에 따르면, 빈곤 가구주의 대부분은 비정규직에 취업되어 있거나 실업되어 있는 상태이며, 새롭게 빈곤상태에 진입한 가구주와 빈곤상태를 지속하는 가구주의 고용형태도 빈곤가구주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안정된 고용형태의 유지가 빈곤이행에 매우 중요한 변수라는 것이다.

타났으며, 경제위기 이후인 III시기(2000~2002)에는 민간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가구의 빈곤 가능성도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오히려 IV 시기(2003~2005)의 분석에서는 1차 산업과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가구의 빈곤 가능성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변화되었으며,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가구의 빈곤 가능성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가구에 비해 높게 유지되었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직업형태, 직종, 업종별로 상이한 노동시장의 구조가 빈곤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분석에서 밝혀진 직종과 업종별 빈곤 가능성의 차이가 우리나라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의 직종과 업종별 분포 혹은 비중과 일치한다는 점이다. 석재은·최병호·김용하·박병현·이상은·홍경준·임정기·최옥금(2005)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괜찮은 일자리의 직종별 분포는 전문관리직(39.5%)이 가장 높고, 사무직(30.7%), 기능직(20.2%), 판매서비스직(6.0%) 순이며, 단순노무직(2.1%)이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²⁴⁾ 한편, 업종별 분포를 보면, 기타서비스업(37.0%)이 가장 높고, 광업 및 제조업(29.8%), 금융·보험 및 부동산업(10.1%), 전기·가스 및 운수·통신업(9.5%), 도소매업(7.2%), 건설업(3.9%), 음식·숙박업(1.3%) 순이며, 농림·수산업(0.2%)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²⁵⁾ 결국 우리나라 도시 근로자 가구의 빈곤문제와 원인은 가구주가 취업하고 있는 일자리의 질(quality)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24) 여기서 의미하는 괜찮은 일자리란, 임금이 중위임금의 2/3이상이고, 취업이 주관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안정적이며, 4대 사회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는 임금 일자리를 의미한다. 또한, 개별 수치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7차 자료에 대한 분석에 기초한 것이다(석재은 외, 2005).

25) 여기서 석재은 외(2005) 연구의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은 본 연구의 민간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괜찮은 일자리의 업종별 분포는 본 연구의 (공공)서비스업, 제조업, 건설·전기·운수·창고·통신·금융·보험업, 민간서비스업, 제1차 산업의 순으로 볼 수도 있다. 한편 동일 기준에 기초하여, 괜찮은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분포를 보면, 정규직이 97.0%이고, 비정규직이 3.0%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시기별 빈곤의 원인에 대한 GEE 분석 결과

	1995-1997 B (S.E)	1998-1999 B (S.E)	2000-2002 B (S.E)	2003-2005 B (S.E)
성 (여성)	-1.154 (0.088) ***	-0.775 (0.089) ***	-0.836 (0.069) ***	-0.921 (0.052) ***
연령 (60대 이상)				
20대 이하	0.048 (0.159)	-0.017 (0.152)	-0.045 (0.119)	0.094 (0.098)
30대	-0.403 (0.154) **	-0.334 (0.136) **	-0.221 (0.102) **	-0.279 (0.080) ***
40대	-0.561 (0.148) ***	-0.549 (0.134) ***	-0.346 (0.098) ***	-0.477 (0.076) ***
50대	-0.699 (0.145) ***	-0.550 (0.127) ***	-0.378 (0.099) ***	-0.542 (0.072) ***
교육수준 (대졸 이상)				
초졸이하	1.149 (0.167) ***	1.074 (0.168) ***	0.731 (0.122) ***	0.714 (0.095) ***
중졸	0.799 (0.143) ***	1.037 (0.156) ***	0.650 (0.126) ***	0.715 (0.090) ***
고졸	0.502 (0.120) ***	0.612 (0.139) ***	0.494 (0.090) ***	0.224 (0.075) **
전문대졸	0.101 (0.156)	0.159 (0.163)	0.245 (0.111) *	0.031 (0.092)
가구원수	0.327 (0.026) ***	0.228 (0.027) ***	0.213 (0.024) ***	0.269 (0.022) ***
부양자수 (2인)				
일인생계	-1.868 (0.075) ***	-1.532 (0.068) ***	-1.640 (0.059) ***	-1.769 (0.043) ***
직업형태 (임시·일용)				
공무원	-2.041 (0.229) ***	-2.362 (0.261) ***	-2.676 (0.231) ***	-3.460 (0.224) ***
사무종사자	-1.118 (0.168) ***	-1.100 (0.213) ***	-1.348 (0.219) ***	-1.397 (0.146) ***
상용노무자	-0.609 (0.079) ***	-0.552 (0.072) ***	-0.420 (0.058) ***	-0.729 (0.043) ***
직종 (단순노무)				
관리전문	-0.432 (0.181) *	-0.467 (0.211) *	-0.326 (0.202) *	-0.753 (0.151) ***
사무직	-0.140 (0.183)	-0.325 (0.209)	-0.107 (0.210)	-0.490 (0.150) ***
서비스	-0.353 (0.123) **	-0.273 (0.119) *	-0.453 (0.088) ***	-0.524 (0.068) ***
생산직	-0.222 (0.085) **	-0.192 (0.089) *	-0.305 (0.070) ***	-0.409 (0.054) ***
업종 (제조업)				
1차 산업	0.433 (0.170) *	0.476 (0.189) **	0.235 (0.108) *	0.069 (0.157)
건설운수금융	0.050 (0.083)	0.266 (0.082) ***	0.196 (0.066) **	0.443 (0.053) ***
공공서비스	0.217 (0.125)	0.280 (0.114) *	0.228 (0.075) **	0.506 (0.070) ***
민간서비스	0.047 (0.098)	0.137 (0.096)	0.152 (0.070) *	0.551 (0.061) ***
t 년	0.190 (0.048) ***	-0.049 (0.034)	0.094 (0.043) *	0.279 (0.050) ***
t + 1 년	0.100 (0.039) **	--	0.050 (0.035)	0.245 (0.052) ***
상수	0.279 (0.250)	0.256 (0.252)	0.290 (0.187)	0.513 (0.158)
log likelihood	-26,344.750	-19,027.212	-25,960.079	-33,924.162
N	116,302	71,835	101,835	127,399

*: $p < 0.05$, **: $p < 0.01$, ***: $p < 0.001$

6. 공·사이전소득과 조세의 빈곤완화 효과

본 절에서는 소득원 유형별 상대적 빈곤율과 빈곤갭 비율의 변화 정도에 대한 시계열적 분석을 통해 공·사이전소득과 조세의 빈곤완화 효과를 비교할 것이다. <표 2>와 <그림 9>는 도시 근로자 가구의 소득원 유형별 상대적 빈곤율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일차소득부터 가처분소득까지 개별 소득원 유형별 빈곤율의 변화는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어느 정도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던 I 시기(1995~1997)의 상대적 빈곤율이 경제위기 시기(1998~1999)에 크게 증가하였고, 이후 III 시기(2000~2002)에 조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IV 시기(2003~2005)에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위기 시기 이후, 일차소득과 가처분소득의 상대적 빈곤율의 차이가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공·사이전소득과 조세의 빈곤완화 효과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분석의 전 기간동안 사적이전소득의 빈곤완화 효과는 약간의 등락이 있지만, 평균 9.73%(최소 7.76%, 최대 12.00%)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한편, 공적이전소득의 빈곤완화 효과는 평균 2.83%(최소 -4.40%, 최대 6.77%)에 불과하며, 조세에 의한 빈곤완화 효과도 평균 6.52%(최소 2.86%, 최대 9.68%) 수준에 불과하여, 사적이전소득의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특히, 1995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동안 공적이전소득의 빈곤완화 효과는 1.0% 수준 혹은 그 이하에 불과하며, 1997년의 수치는 오히려 공적이전소득이 상대적인 소득분배구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낮은 수준의 공적이전소득의 빈곤완화 효과는 2001년부터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4년 이후에는 조세의 그것과 유사한 수준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는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감소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조세의 빈곤완화 효과는 공적이전소득의 그것과 또 다른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경제위기 이전, I 시기(1995~1997), 조세의 빈곤완화 효과는 매우 높은 수준(8.42~9.20%)이었으나, 경제위기 시기(1998~1999)에는 그 효과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후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I 시기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2003년 이후, 공적이전소득과 조세의 빈곤완화 효과가 사적이전소득의 그것을 뛰어 넘을 만큼 크게 확대되어, 이전의 시기에 비해 정부의 빈곤감소에 대한 노력이 크게 확대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²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조세와 공적이전소득의 빈곤완화 효과는 OECD 국가의 그것과 비교

26) <표 2>를 보면, 1995~1996년에도 공적이전소득과 조세의 빈곤완화 효과가 사적이전소득의 그것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데, 그것은 주로 조세에 의한 빈곤완화 효과이다. 그러나 사실 빈곤완화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한 것은 공적이전소득의 역할이다. 사회보장제도의 주요 목적을 기준으로 엄밀하게 정의한다면, 조세와 사회보험 기여금은 한 사회의 소득재분배(보다 정확하게는 소득 불평등 완화)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고, 공적부조의 급여는 최저생계에 대한 보장(security)과 빈곤 완화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 볼 때, 아직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아래의 <그림 10>은 가처분소득에 기초한 OECD 국가들의 상대적 빈곤율과 공적이전소득과 조세의 빈곤완화 효과(Förster and D'Ercole, 2005)와 본 연구의 분석에 기초한 우리나라의 빈곤완화 효과를 비교하고 있다. 그림에 의하면, 총소득에 기초한 상대적 빈곤율의 경우, 우리나라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조세와 공적이전소득의 빈곤완화 효과가 반영된 가처분소득에 기초한 상대적 빈곤율을 비교해 보면, 캐나다, 일본, 영국, 미국, 호주와 같은 자유주의 복지국가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의 상대적 빈곤율이 우리나라의 그것보다 낮아지고 있어, 이들 정부의 빈곤완화 노력의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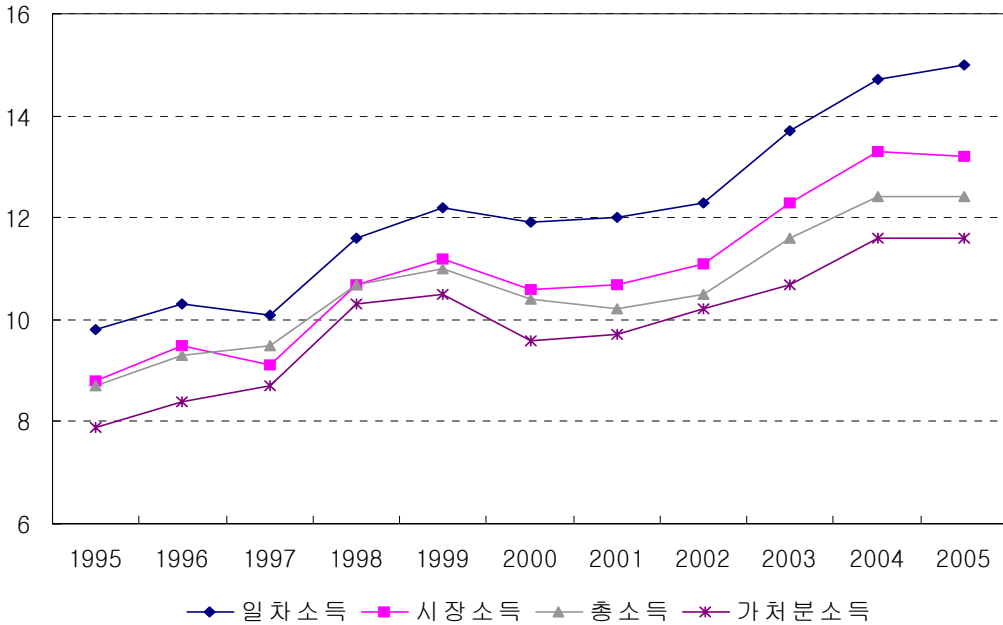
<표 2>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원 구성별 빈곤율과 빈곤완화 효과의 변화 추이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빈 곤 율	일 차 소 득	9.8	10.3	10.1	11.6	12.2	11.9	12.0	12.3	13.7	14.7	15.0
	시 장 소 득	8.8	9.5	9.1	10.7	11.2	10.6	10.7	11.1	12.3	13.3	13.2
	총 소 득	8.7	9.3	9.5	10.7	11.0	10.4	10.2	10.5	11.6	12.4	12.4
	가처분소득	7.9	8.4	8.7	10.3	10.5	9.6	9.7	10.2	10.7	11.6	11.6
완 화 효 과	사적이전	10.20	7.77	9.90	7.76	8.20	10.92	10.83	9.76	10.22	9.52	12.00
	공적이전·조세	10.33	11.78	4.03	3.74	6.33	9.58	9.57	8.26	13.45	13.22	12.51
	공적이전	1.14	2.11	-4.40	0.00	1.79	1.89	4.67	5.41	5.69	6.77	6.06
	조세	9.20	9.68	8.42	3.74	4.55	7.69	4.90	2.86	7.76	6.45	6.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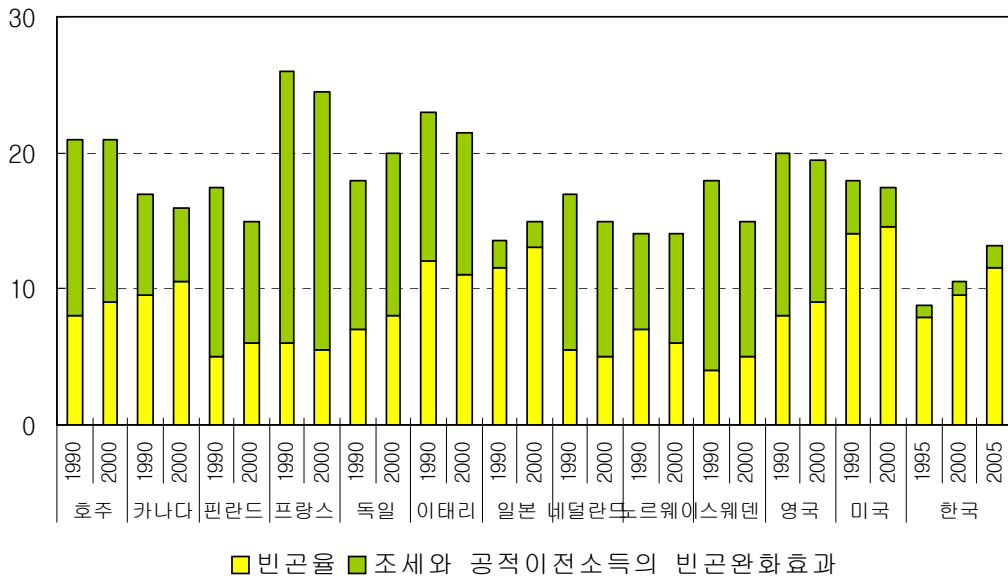
주 : 사적이전소득의 빈곤완화효과 = (일차소득 빈곤율 - 시장소득 빈곤율) / 일차소득 빈곤율 × 100

공적이전소득의 빈곤완화효과 = (시장소득 빈곤율 - 총소득 빈곤율) / 시장소득 빈곤율 × 100

조세의 빈곤완화효과 = (총소득 빈곤율 - 가처분소득 빈곤율) / 총소득 빈곤율 × 100



<그림 9>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원 구성별 빈곤율의 변화 추이



자료: Förster and D'Ercole(2005), 한국은 본 연구의 수치

<그림 10> 빈곤율과 조세 및 공적이전소득의 빈곤완화 효과에 대한 국제 비교

7.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분석의 결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그 규모와 심도 차원에서 심각했던 도시 근로자 가구의 빈곤 문제가, 이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여성빈곤, 노령빈곤, 저학력 가구주 가구의 빈곤 등의 전통적인 빈곤가구의 특성이 확인되었으며, 이들 취약집단의 빈곤화 현상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욱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임시·일용직, 단순노무직, 1차 산업과 민간서비스업 종사자 가구의 빈곤화 현상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저임금과 고용불안정이 빈곤의 주된 원인임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빈곤 가구의 특성은 빈곤의 원인에 대한 분석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된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도시 근로자 가구 빈곤의 주된 원인은 낮은 인적자본 수준과 분절된 노동시장 구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분절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고, 이는 고용시장의 불안정으로 연결되었으며,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인적자본 수준을 가지고 있는 취약 집단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더욱 악화되었다. 다시 말해, 전통적인 빈곤가구의 특성을 보이는 여성, 노인, 저학력 근로자 가구의 고용 관련 특성이 저임금, 미숙련,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보이는 노동시장의 주변적 위치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²⁷⁾ 더욱이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사회보험제도의 구조는 정규직 노동시장에서의 활동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근로빈곤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대상에 포함되기도 불가능하여, 이들은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집단이다.²⁸⁾ 즉, 이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부가급여 수준, 불안정한 고용상태,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의 미적용 등의 이유로 인해 다른 집단에 비해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집단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 취약집단이 가지는 사회적 배제현상을 제거하기 위하여, 우선 최저임금수준의 상향·조정과 실질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²⁹⁾하고, 고용안정과 적절한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의 창출과 고용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적

27) 실제 본 연구에서 실시한 부가적인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2005년을 기준으로, 여성, 60세 이상의 연령층, 초등학교와 중학교 졸업의 교육수준을 가진 근로자의 임시·일용직, 단순노무직, 그리고 민간서비스업 취업률이 가 다른 직업형태, 직종 및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여성 가구주의 41.2%가 임시·일용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23.1%가 단순노무직, 그리고 45.6%가 민간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리고 노인 가구주의 45.4%가 임시일용직, 60.2%가 단순노무직, 50.5%가 민간서비스업에 취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초졸과 중졸 이하 가구주의 59.5%와 48.1%가 임시·일용직에 근무하고 있으며, 50.4%와 28.2%가 단순노무직과 37.6%와 28.3%가 민간서비스업에 근무하고 있다.

28) 남기철·성은미·유의선·황형욱(2005)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38만명이고,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 빈곤층은 372만명으로 수급자 규모의 2배가 넘고 있다.

29) 혹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조속한 도입을 통해 이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보충해 줄 수도 있다.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김교성·최영, 2006).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한 사회 서비스(social services) 분야의 확대와 일자리 창출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사회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등과 같은 사회 서비스 분야의 괜찮은 일자리 창출은 매우 적절해 보인다(홍경준, 2005b). 정부는 가족에서 제공되던 기존의 보호(care) 서비스를 보편적이고 종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로 재구성하여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취약집단의 노동시장 참여를 독려할 수 있을 것이다.

공·사이전소득에 대한 분석 결과, 2000년 이후, 정부의 조세와 공적이전소득의 빈곤완화 효과는 이전의 시기에 비해 크게 확대되었지만, 그 상대적인 효과는 서구의 복지선진국(welfare leader)과 비교해 볼 때,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낮은 수준이다. 이는 그만큼 빈곤층에 대한 우리 정부의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복지개혁을 통해 국가복지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그 결과가 실제적인 빈곤 가구 규모의 감소와 소득불평등 정도의 완화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김교성, 2003). 이러한 과정에서,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을 위한 지원대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데, 차상위 계층은 경제 수준의 변화에 따라 언제라도 빈곤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불안정 계층이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수당 형식의 소득보장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수당, 노인수당, 장애인수당과 같은 수당제도의 마련하고 지원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는 차상위 계층 혹은 근로빈곤층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동시에 그들의 빈곤탈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김교성·반정훈, 2004). 또한 마지막으로 유연화된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있지 않고 동시에 고용보험제도의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는, 근로빈곤층의 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실업부조제도의 도입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구인회. 2002.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이행: 경제위기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8: 82-112.
- _____. 2004. “한국의 빈곤, 왜 감소하지 않는가?: 1990년대 이후 빈곤 추이의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6(4): 57-78.
- _____. 2005. “빈곤의 동태적 분석: 빈곤 지속기간과 그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 57(2): 351-374.
- 김재호·김승택. 2001. “빈곤의 원인에 대한 실증분석: 패널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노동경제학회 2001년 추계학술세미나 발표문』. 서울: 한국노동경제학회.
- 김재호. 2006.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근로빈곤상태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29(1): 41-73.
- 김교성. 2002. “소득이전의 빈곤완화 및 빈곤이행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8: 113-149.
- _____. 2003. “도시 근로자가구의 소득원 구성과 분배구조의 변화: 1996~2002”, 『한국사회복지학』 55: 181-204.
- 김교성·반정훈. 2004. “고용상태와 빈곤경험이 빈곤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18(4): 31-54.

- 김교성·최영. 2006. “근로계층의 빈곤 결정요인에 관한 다층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8(2): 119-141.
- 김미곤·여유진·양시현·강성호·김태완·이강민. 1999.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곤. 2000. “1999년 빈곤선 계측방식과 수준”. 『보건복지포럼』 41: 5-16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동춘·류정순·정건화·장세훈·허선·노대명·손병돈. 2000.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빈곤』 서울: 참여연대.
- 김영란. 2005. “한국의 신빈곤현상과 탈빈곤정책에 관한 연구: 근로빈곤층의 실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7(2): 41-69.
- 김진욱. 2004. “빈곤층 변화 요인 분석: Sen 지수를 중심으로”. 『경제발전연구』 10(2): 295-320.
- 김태성. 1995. “저소득층 소득분배 형태의 변화추세: 1966-1992”. 『사회복지연구』 6: 35-69.
- 김태성·손병돈. 2002.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서울: 청록
- 남기철·성은미·유의선·황형욱. 2005. “빈곤정책의 전환 모색: 사회적 배제를 넘어”. 서울: 진보정치연구소.
- 노대명·신영석·이태진·최승아. 2004. “저소득층 현물급여 확대방안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대명·최승아·주연선·구지윤. 2004. “한국 근로빈곤층의 소득·고용실태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류연규·최연수. 2003. “우리나라 아동빈곤율 수준과 변화경향: 1982~2002년 도시근로자가구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16: 135-165.
- 박능후·송미영. 2006. “노인가구 유형별 빈곤상태 변화에 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31: 7-26.
- 박순일. 1994. “한국의 빈곤 현실과 사회보장”. 서울: 일신사.
- 박찬용·강석훈·김태완. 2002. “소득분배와 빈곤동향 및 변화요인 분석”.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석재은·김태완. 2000. “노인의 소득실태 분석과 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석재은·최병호·김용하·박병현·이상은·홍경준·임정기·최옥금. 2005.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민 기본생활보장”.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안중범·김철희·전승훈. 2001. “빈곤과 실업의 원인과 복지정책의 효과”. 『제3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1-11.
- 양정호. 2004. “고등학생의 재학 중 아르바이트 참여요인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4(1): 17-37.
- 여유진·김미곤·김태완·양시현·최현수. 2005.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분해』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유경준. 2003. “소득분배 국제비교를 통한 복지정책의 방향.” 『KDI 정책포럼』 167: 1-22.
- 윤홍식·조막래. 2006. “생계부양형태에 따른 가구특성과 빈곤실태: 일인생계부양가구와 이인생계부양가구의 비교”. 2006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315-320.
- 이상은. 2006. “우리나라에서 경제성장과 빈곤의 관계: 1982~2004년 도시가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학회 2006 전반기 학술대회 자료집: 1-25.
- 이태진·이상은·홍경준·김선희. 2004. “근로빈곤층의 실태와 대응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기초보장 자활정책평가센터.
- 정진호. 2001. “최근의 소득불평등도 변화와 소득원천별 분해”. 『노동정책연구』 1: 1-18.
- 최현수·류연규. 2003. “우리나라 노인빈곤 동향 및 빈곤구성에 대한 연구”. 『한국노년학』 23(3): 143-160.

- 통계청. 2003. 인터넷 자료 (2003, 8). <http://nso.go.kr>
- 홍경준. 2002.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의 빈곤 감소 효과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0: 61-85.
- _____. 2004. “빈곤에 대한 동태적 분석: 빈곤주기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4: 187-209.
- _____. 2005a. “근로빈곤층에 대한 탐색적 연구: 개념정의와 실태파악”. 『한국사회복지학』 57(2): 119-142.
- _____. 2005b. “한국 복지체제의 새로운 좌표를 찾아서; 전환을 위한 현실진단과 과제”. 『한국 사회복지의 좌표: 2005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한국사회복지학회: 19-38.
- 홍백의. 2005. “우리나라 노인 빈곤의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4): 275-290.
- Allison, P. 1999. *Logistic Regression using the SAS System: Theory and Application*. SAS Institute.
- Atkinson, A. B., L. Rainwater, and T. M. Smeeding. 1995. "Income Distribution in OECD Countries, Evidence from the Luxembourg Income Study," *Income Distribution in OECD Countries*, OECD Social Policy Studies 18, Paris.
- Mitchell, D. 1991. *Income Transfers in Ten Welfare States*. Aldershot: Avebury.
- Föster, M. and M. M. D'Ercole. 2005.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in the Second Half of the 1990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 Liang, K. and S. L. Zeger. 1986. "Longitudinal Data Analysis using Generalized Linear Models," *Biometrika* 73(1): 13-22.

Trends and Causes of Poverty among Urban Wage Earners' Households

Kim, Kyo-Seong
(ChungAng University)

The major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offer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changing trends and causes of poverty among urban wage earners' households from 1995 to 2005. In order to do that, this study used the micro data of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of Urban Households"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NSO) and GEE(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regression model which is know as an appropriate method for the longitudinal and clustering data. The results show that (1) the numbers of poverty rate and poverty gap in recent years are even getting seriously worse than those in the IMF crisis. (2) Main characteristics of poor are female headed, old aged, low educated households, and having atypical working position. (3) Major determinants of poverty are also related to the variables as mentioned the above. (4) However, poverty reduction effect of public transfer increased preferably in recent years.

Key words: poverty, working poor, poverty status, GEE,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논문접수일 2007. 1. 10. 게재확정일 2007. 4. 6.]